



# “미국의 압력보다 정부의 대처 자세가 더 큰 문제”

◇…UR농산물협상에 따른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경실련(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회)대표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장원석교수(단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를 만나보았다.

이번 미국방문이 UR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농업경제, 특히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교수:** 현재 진행중인 UR농산물 협상내용의 부당성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의 피해를 미국에 알리고 향후의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자료수집차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미의 일정과 활동내용은?

**장교수:** 지난 1월 16일 출국하여 미 무역대표부의 크리스토프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농무성과 상무성의 실무협상 대표자, 미국의 농민연맹, 가족농연합,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인

권운동가, 하비목사, 공화당·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만나 정확한 미국의 입장과 우리 농민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점점 UR농산물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되는데…

**장교수:** 농산물이란 농산물 자체가 갖는 저장·수송·가격 등의 특성 및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공산품과는 달라서 자유무역 원칙이 아니라 조정무역원칙에 입각해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조정무역이란 무역대상품의 안보·안정성·수급 등을 고려하여 수입국이 주체적으로 수입량을 결

정하는 무역으로 농산물은 국민들의 건강, 농민의 생존권,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때 UR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정부와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만 이익이 갈 뿐, 우리 농민과 미국농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UR농산물협상에 모두 찬성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농민과 시민들은 UR농산물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선육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미국민들은 남미로 부터 냉동육을 수입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교수님은 이번 방미때 조정무역원칙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교수 :** 미국정부의 입장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무성의 경우 조정무역원칙 자체는 수긍하면서도 교역을 통하여 가격상의 소비자잉여와 미국의 재정·무역적자 해소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고, 무역대표부는 이론적 원칙론적 반론을 회피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유화를 하겠다고 누차 약속하였으니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NTC품목을 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으며, 미국에 와서 하는 이야기와 한국에 가서의 이야기가 다르다

고 화를 내어가며 성토했고, 농무성의 경우는 조정무역원칙은 소수의 견해이거나 영향력이 없는 단체의 주장이라 과소평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재정·무역적자의 원인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공산품 자체의 국제경쟁력 약화때문이고, 가격상의 소비자잉여때문에 소비자의 건강, 환경파괴는 방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일관성이 없고 경농정책으로 나온 것은 나 자신 분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반하고 힘의 원리에 의존하는 미국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미국은 수입개방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한국측으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며, 301조 등은 더 없이 가공할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교수 :**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GATT에 상응한 GAPP(농업생산 및 가격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ices)을 설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농민연맹이 제안한 것으로 각국의 농민대표와 농업 및 농산물 무역 전문가들이 모여 농산물 무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각국 농민·소비자·환경단체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며, 시민과 농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한번 수입개방이 되면 이후의 우리 농업의 자급도는 다시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인터뷰: 박진규 기자)